

소비쿠폰 효과 ‘반짝’…광주 4분기 소비심리 다시 위축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3분기 102서 92로 하락
소비쿠폰 영향 70% “긍정적”…49% “사용처 확대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종료 등의 영향으로 광주시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지수가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추석 연휴 특수 효과 등으로 백화점과 슈퍼마켓 업체만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9일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에 따르면 광주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92를 기록했다. 전분기(102) 대비 하락한 수치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음을, 기준을 넘지 않으면 그 반대다.

광주상의는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이 4분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 소비 심리 위축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종료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소비가 둔화하면서 업계의 체감 경기가 전분기와 비교해 '악화 전망'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매출전망지수(102→84)와 수익전망지수(87→80)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이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의 경쟁 심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구매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상의는 인건비·임차료·물류비 등 고정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인 데다 소비 심리 위축 속에서 가격 인상 전가도 어려워 수익 구조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체별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75→50)와 편의점(106→94) 모두 '악화'를 전망했다.

매출 변화에 대해서 '거의 변화 없음'(32.0%), '오히려 감소'(17.0%) 응답이 절반에 육박했다. 광주상의는 소비쿠폰 사용 기간이 짧고 사용 범위가 제한적인 탓에 업체들이 지속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반면 백화점(100→100)과 슈퍼마켓(118→109)은 명절 특수 수요에 이어 연말 특수 기대감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다만 경기 전반의 침체 국면이 이어질 경우 백화점의 매출 개선 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 업체의 70.2%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주요 소비 채널이 제외돼 유통 전반의 매출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3일부터 17일까지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업체는 대형마트 4개, 백화점 2개, 편의점 17개, 슈퍼마켓 11개, 전자상거래 13개 등 총 47개다.

소비쿠폰 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9%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46.7%는 '사용처 확대', 33.3%는 '금액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언급했다.

재화석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소비 심리 회복 지연과 구조적 비용 부담이 맞물리며 지역 유통업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단기적인 소비 부흥책이 아닌 유통 구조 혁신, 온라인 경쟁 대응, 비용 절감 지원 등 실질적인 산업 체질 개선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미 이어 EU도 “50% 관세·쿼터 축소”…철강 업계 ‘초긴장’

한국 지난해 380만t 무관세 수출

유럽연합(EU)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철강 관세를 50%로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 만큼 철강업계는 정부와 함께 EU 측을 설득하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EU는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작년 기준 연간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U는 또 개별 국가별 수입 쿼터는 추후 무역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6월 철강 셰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시행 종료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된다.

한국은 지난해 380만t 규모의 철강 제품을 EU에 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263만t(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로,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EU는 수입 철강에 대해 글로벌 쿼터를 부여해 어느 국가 제품이건 쿼터를 먼저 선점하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자칫 한국이 적용받는 수출 쿼터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글로벌 쿼터 역시 축소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로 수출 전선에 지장을 받는 국내 철강업체는 EU의 이번 발표에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MTI 61 기준)은 44억8000만달러(6조3000억원) 규모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5000만 달러)과 1·2위를 다투고 있다.

앞서 미국이 지난 3월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기존의 무관세 수입 쿼터(한국은 연 263만t)를 폐지

하고 품목 관세를 25%에서 50%까지 높이면서 올해 한국 철강 수출은 4월을 제외하곤 모두 작년보다 감소하며 고전하고 있다.

한국의 철강 수출은 미국의 '관세 폭탄'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데 이어 6월 -8.2%, 7월 -3.0%, 8월 -15.4% 등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 미국이 8월부터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남강강, 변압기, 전선-케이블 등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대미 수출이 위축되면서 전체 철강 수출도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는 다만 EU 집행위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추후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며 희망을 걸고 있다.

산업통상부도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면서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연합뉴스



2025 K-EXPO : All about K-Style에 참가한 국내 수출업체와 유럽 바이어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제공>

aT, 스페인 K-엑스포 참가 수산식품 홍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8~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2025 K-EXPO : All about K-Style’에 참가해 한국산 수산식품을 적극 홍보했다”고 9일 밝혔다.

aT는 스페인 마드리드 도심 내 대표적인 문화 예술 공연장인 ‘아르테스 예술센터’에 수산식품 홍보관을 마련하고, 매운맛 김과 다시마 부각, 오징어 스낵, 전복죽 등 다양한 한국식 씨푸드 맛볼 수 있는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유명 요리 프로그램 ‘마스터셰프 코리아’ 시즌1 준우승자이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알려진 박준우 셰프가 스페인 대표 음식인 타파스에 한국 대표 수산 수출품목인 김을 접목한 김부각 타

파스와 전복을 활용한 전복장 덮밥을 만드는 쿠킹쇼 등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지난날 29~30일 ‘리우플라자 호텔’에서는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8개사와 유럽 바이어 27개사가 참여한 B2B(기업 간) 수출 상담회가 진행됐다. aT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139건의 수출상담과 52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 17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전기관 aT 수출식품이사는 “최근 스페인으로 오징어, 바지락, 굴 등 한국산 수산물 수출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전남 자영업자 절반 이상 대출로 버틴다

자영업자 수도 1년만에 5% 감소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채무와 연체금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의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이후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 침체까지 겹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수는 올 7월 말 기준 21만 7665명이다. 광주가 8만 5130명, 전남은 13만 253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통계청이 집계한 전체 자영업자 수는 광주 13만 9000명, 전남 28만 8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대출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금융 채무를 불이행한 자영업자 수도 광주와 전남이 각각 4929명, 6422명에 달했다. 금융 채무 불이행자는 대출 보유자 중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경우를 뜻한다.

지역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전남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8월 기준 45만명이었지만, 1년 만에 42만 7000명으로 5.1% 감소했다. 이는 더 이상 대출로도 유지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광주시 금융 채무 불이행 개인사업자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00명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직후인 2023년에는 3623명까지 치솟은 뒤 2024년 4750명, 2025년 7월 기준 4929명 등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금융 채무 불이행 개인사업자 수도 2020년 1563명에서 2025년 7월 6422명으로 5년 새 4.1배 증가했다.

지역 전체 대출 금액도 광주는 2020년 18조 7619억원에서 올 7월 24조 7898억원으로 6조원이나 폭등했고, 전남도 30조 7626억원으로 1.5배 증가했다.

특히 금융 채무 불이행자들의 대출금액은 2020년 광주 1978억원, 전남 2205억원에서 2025년 7월 기준 광주 8969억원, 전남 1조 513억원으로 5년동안 4.5배 이상 급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올해 주식 투자 성적표 외국인 ‘압승’…개미 수익률의 4배

올해 외국인의 투자 수익률이 개인의 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대형 반도체주에 집중했지만, 개인은 네이버와 이차전지주를 대거 끌어 담는 모습을 보였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일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많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모두 지난해 말 대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삼성

전자로 5조6590억원 순매수했다. 주가는 지난해 말 5만3200원에서 이달 8만9000원으로 67.3% 뛰었다.

외국인들이 매수한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45.6%로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47.9%)의 3배를 웃돌았다.

반면 개인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7.0%로 외국인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47.9%)도 밑도는 수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삼성전자가 한글날 맞아 미국서 ‘한글 트럭’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한글 트랙에 나만의 메시지를 작성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집값 양극화 심화…수도권-지방 아파트값 차이 17년 만에 최대

인구 집중·다주택자 규제 영향
공공기관 이전 등 유인책 필요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 집중, 다주택자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방에 비해 많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52.0, 105.2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해서 산출한 것으로, 지난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 1.4449는 지난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확대됐다는 뜻이다.

수도권-지방 아파트값 수준 차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점차 축소됐다. 이후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고,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2023년 이후 다시 커졌다.

최근에는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수도권 주택가격만 끌어올리며 지역 간 주택 경기 양극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경제학회에서 발표한 ‘지역 간 주택경기 양극화 현상 분석’ 논문에도 따르면 더미변수 추정 등을 통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간 아파트

가격 변화율(KB매매가격지수 기준)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0.912% 상승했지만, 기타 지방은 0.07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규제가 일률적으로 강화되면 여러 채주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가격 상승 확률이 높은 주택을 소유하려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방보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는 것이다. 또 금리가 올라 주택 매입 기회비용이 오르거나, 경기가 침체하는 경우 더는 지방 주택을 보유할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방 주택 가격은 내려가게 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려면 지방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해외 진출 기업 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해나 기자 khn@